

오늘날의 역사학, 정조 연간 탕평정치 및 19세기 세도정치의 삼각대화

반론: 조선 후기 정치의 맥락에서 탕평군주 정조 읽기에 답한다

A Trialogue among King Jeongjos Policy of Impartiality, Dominance of Royal In-Law Families in the 19th Century and Modern Historiography

저자 (Authors)	오수창 Oh, Soo-Chang
출처 (Source)	역사비평 , 2016.8, 204-234(33 pages) Critical Review of History , 2016.8, 204-234(33 pages)
발행처 (Publisher)	역사비평사 The Institute For Korean Historical Studie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769278
APA Style	오수창 (2016). 오늘날의 역사학, 정조 연간 탕평정치 및 19세기 세도정치의 삼각대화. 역사비평, 204-234
이용정보 (Accessed)	이화여자대학교 203.255.***.68 2020/01/27 13:44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반론: 「조선 후기 정치의 맥락에서 탕평군주 정조 읽기」에 답한다

오늘날의 역사학, 정조 연간 탕평정치 및 19세기 세도정치의 삼각대화

오수창

1. 머리말

정조와 정조 연間は 한국사 연구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연구 역량이 집중된 주제 중의 하나이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일찍부터 정조 연間の 정치 개혁, 문화적 축적, 사회경제적 개혁론에 특별한 관심을 쏟아왔으며, 특히 그러한 업적을 주도한 국왕 정조를 둘러싸고 많은 연구 성과가 산출되었다. 학자들뿐 아니라 시민들 또한 정조와 그 시기의 정치에 많은 관심을 쏟았다. 여기에는 대중문화 수준에서 무책임하고 자극적으로 제기된 정조가 암살당했다는 주장이나 새롭게 등장한 정조의 비밀 어찰 등도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그러나 정조와 그 시기를 집중적으로 조명해온 근본적인 이유는 그때가 400년간 이어온 조선시대의 정치체제와 그 역사적 성격이 크게 전환하는 길목에 서 있었다는 문제의식과 기대 때문이었다.

‘새롭게 보는 정조와 19세기’의 기획도 그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 주어진 과제는 탕평과 세도정치기의 정치구조 변화

에 대하여 그것이 지배층 일부의 변질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국가·체제 차원에서 중인·민의 동향에 반응한 것인가를 검토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가능성을 살피는 것이었다. 동시에 기획 취지의 수정도 가능하다는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해주었다.⁰⁰¹ 필자는 동료들과 함께 19세기의 세도정치를 종합적으로 탐구하였다. 또한 17세기 사족의 봉당정치론과 18세기 군주의 탕평정치론이 내적인 한계와 모순으로 인해 과열되고 19세기에 민과 국가 권력이 직접 대면하게 되는 맥락을 정리한 바 있다.⁰⁰² 19세기에는 하층민의 정치적 활동이 다양한 모습으로 급격히 확대됨으로써 정치사의 구성 자체가 달라진 것이다.⁰⁰³ 조선 후기 정치사 연구는 18세기까지 봉당정치나 탕평정치 등 지배층의 정치에 초점을 맞추더라도 19세기 정치사의 무게중심은 민의 정치 활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기획의 취지에 따라 정조 및 탕평정치와 세도정치의 관계를 검토하기로 한다. 지배층이 주도하는 정치가 어떻게 변화되어왔는가 하는 문제는 민의 정치력 증대와 긴밀히 연결된 문제일 뿐 아니라, 조선 후기 18세기의 탕평정치와 19세기 세도정치 사이의 단절과 연결에 대해 학계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탕평정치와 세도정치의 관계에 대한 시각이 정조 및 그의 정치를 어떻게 보는가에 긴밀히 결합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런데 이 기획의 첫 논문 「조선 후기 정치의 맥락에서 탕평군주 정조 읽기」는 정조의 탕평정치를 향한 오늘날의 정치사 연구는 무엇을 탐구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인지, 역사 탐구의 결과물이 현실의 생활과 실천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저자의 색다른 관점을 뚜렷이 드러냈다.⁰⁰⁴ 그러한 문제제기를 통해 조선 후기의 정치사를 연구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문제의식의 출발점이나 연구방향이 얼마나 다른지 확인되었다. 한쪽에서 근대 이후 역사학

의 기초라고 믿고 있는 것을 다른 이들은 공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 연구 시각의 차이는 필연적으로 정조 탕평정치와 19세기 세도정치의 이해에 결합된다. 이 글에서는 탕평정치와 세도정치의 관계를 검토하기에 앞서 위 논문에서 제기된 정조 연간 정치사를 보는 시각에 대해 먼저 토론하고자 한다. 그동안 각자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자세하게 따져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던 차이점을 확인하고 그 기초부터 점검해볼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2. 정조 연간 정치를 보는 시각에 대한 토론

1) 정치 범주의 혼란

‘새롭게 보는 정조와 19세기’ 기획의 첫 논문인 「조선 후기 정치의 맥락에서 탕평군주 정조 읽기」(이하 「정조읽기」)는 오늘날의 정치에 대한 문제 의식과 실천의지를 강하게 표출하였다. 「정조읽기」에서 말하는 정조 연간 정치사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제대로 된 정치를 꿈꾼다면 정치의 경험을 제대로 복원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정조의 탕평정치를 온전히 설명하는 과제가 현재 우리의 정치를 온전하게 복원하는 과제와도 연결된다고 하였다. 이때 정치의 본질을 이루는 것은 ‘갈등의 조정’이다. 사회·정치적 갈등은 집권적 봉건군주체제인 조선 후기에는 국왕에 의해서, 근대적 공화제 혹은 의회제인 현대에는 국민을 대표한다는 대통령 총리에 의해서 조정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갈등 조정의 원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국왕이든 대통령이든 총리

든, 최고의 권력자가 해당 시기의 정치 참여층과 더불어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정치의 본질까지 다르지는 않다. 정치를 경제·사회·개인·혁명과 같은 비정치로 환원하려는 시각이야말로 정치의 영역·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파시즘이나 전체주의가 아니면 개인의 수양 문제로 귀결된다.

위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전제 위에서 있다.

근대 정치체제는 근대적 국민혁명을 직접 경험하거나 그 영향을 받아서 새롭게 구축되었다. 새로운 정치체제가 정착된 이상, 혁명의 경험보다는 정치의 경험이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는 개인이나 사회혁명과 같은 비(非)정치의 영역으로 환원될 수 없다.⁰⁰⁵

위 주장에서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의 영역·역할에 대한 규정이다. 경제·사회·개인·혁명을 비정치(非政治), 또는 비정치의 영역이라고 규정한 것은 다음과 같이 정치학 교과서 첫머리에 나오는 서술과 배치된다.

권력의 획득·유지를 둘러싼 항쟁 및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정치 활동이라 말하고, 그 행동양상을 정치 양상이라고 한다. 정치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환경이나 정치적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는 조건이 정치적 상황이다. 정치적 상황에 있어서 정치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정치적 인간'이며, 정치가 일상화하는 것이 정치 조직이다.⁰⁰⁶

정치는 경제·사회와 같은 정치적 상황, 정치 활동의 주체인 정치적 인간과 분리되어 존재하지 못한다. 혁명·체제변혁 등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정

치 활동이며, 특히 한 사회가 크게 변화하는 시점에서는 정치의 핵심요소가 된다. 혁명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해도 하나의 기능태로서 정치 현장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의 이러한 성격은 시대가 다른 과거라고 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조선시대 정치의 정의나 본질이 위의 내용과 달랐다고 본다면, 그것부터 자기 논리를 세워야 할 것이다.

정치의 본질이 위와 같은데도 경제·사회·개인·혁명을 정치가 아니라고 한다면 정치사 연구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정치를 위해 정치의 경험을 복원해야 한다면 정치의 중요 요소들을 정치가 아니라고 하면, 제대로 된 정치의 경험을 복원하기는 커녕 현실의 정치마저 왜곡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역사학자에게 특히 강조되는 임무는 사회의 구조를 이해하고 시대에서 시대로 이어지는 변화를 해명하는 것이다. 정치사 연구자가 경제·사회·개인·혁명의 문제를 정치의 영역에서 제외한 채 역사학자의 임무를 수행할 방도는 없다고 생각한다.

「정조읽기」의 주장이 ‘갈등의 조정’에 탐구를 집중하기 위해 정치 본연의 영역과 역할을 대단히 좁게 설정한 것이라고 이해해볼 수 있다. 하지만 갈등의 조정에 초점을 맞춘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제·사회·개인·혁명과 연관하여 정치사를 연구하는 입장을 배격해서는 곤란하다. 어떤 연구자가 정치를 경제나 사회, 개인·혁명 등의 문제로 완전히 환원시켜, ‘갈등의 조정’을 비롯한 그 밖의 부문은 정치가 아니며 그런 주제들을 탐구하는 것은 정치사 연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잘못이겠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논자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도 파시즘이나 전체주의와 같은 극단의 혐의까지 동원하는 것은 동료 연구자들에 대한 비판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지만 위험한 연구 경향을 가정하여 경계한 것이라고 한다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된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향해 불

필요한 비판을 가함으로써, 엉뚱하고 애매한 연구자들에게 의심의 눈길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사회나 개인혁명에 초점을 맞추어 정치사를 연구하는 것은 연구자 개인의 선택에 달린 일이다. 그것은 어떤 학자가 자기 문제의식 위에서 한 시대의 정치사를 '갈등의 조정'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할 자유를 지닌 것과 동일하다.

2) 피상적 동질성의 함정

조선 후기 정치에서 갈등의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사실 그대로 파악하는 것은 그것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특히 정조와 탕평정치를 연구할 때 갈등의 조정에 주목하지는 주장은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지지를 모을 수 있다. 탕평이 평등·통합과 타협·화해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으며 18세기 탕평론·탕평책의 존재가 한국 정치사에서 타협과 화해의 전통을 세우며 새로운 시민사회로 진전하기 위한 역사적 경험이 되었다는 주장도, 갈등의 조정에 초점을 맞추자는 견해와 그 실천적 문제의식이 상통한다고 판단된다.⁰⁰⁷ 하지만 '갈등의 조정' 그 자체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⁰⁰⁸ 경제사회·개인·혁명을 비정치로 보고 '갈등의 조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과연 과거와 현재의 한국 정치를 연결시켜 이해할 때 가장 우선적이고 적절한 연구 시각인가?

오늘날 한국 정치에서 논란의 핵심은 어떤 것들인가. 민주주의 정치질서를 뿌리째 뒤흔드는 정보기관의 여론 조작과 정치 개입,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둘러싼 위안부 문제에서 피해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강행된 한·일 정부의 합의, 무고한 죽음을 둘러싼 객관적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정부가 나서서 가로막고 있는 세월호 진상 규명의 문제, 자칫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강대국 간의 대립에 얽혀들 사드 배치 문제 등이 당

장 떠오른다. 이것들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풀리는 문제들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불법에 대한 추상같은 처벌, 인간의 존엄성과 국가의 권한에 대한 원칙 확인, 국민의 생명에 대한 국가의 책임 완수, 위태로운 국제관계 속에서 국가 주권과 민족의 안위를 보장할 방안 모색 등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그 어느 것도 갈등의 조정이라는 방식으로, 더구나 경제·사회·개인 등과 분리시킨 채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하나하나가 당장의 혁명은 아니더라도 체제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고민 없이는 제대로 해명하거나 해결책을 찾기 힘든 사안이다. 나아가 남북통일을 어떻게 이루어내고 통일 이후의 정치체제를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이르게 되면 정치체제가 이미 정착되었다는 전제가 얼마나 안이한 명제인지 확연히 드러난다.

문제는 오늘날 정치를 바라보는 데만 있지 않다. 정조 연간의 정치에서도 중요한 사안들은 모두 경제·사회·개인, 그리고 혁명이나 변혁운동에 연결되는 체제의 문제와 긴밀히 결합되었을 수밖에 없다. 그 시대 정치에서 경제·사회·개인·혁명을 비정치로 규정하고 갈등의 조정 그 자체만을 탐구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러한 정치사 연구가 조선 후기의 역사상을 담을 수는 없을 것이다. 조선 후기의 시대적 성격이 빠진 갈등의 조정을, 경제·사회·개인·혁명을 배제하여 마찬가지로 시대적 성격이 거세된 오늘날 갈등의 조정과 연관시킨다면 그것을 역사학의 성과라고 말하기 힘들 것이다.

혹시 ‘갈등’과 ‘조정’의 뜻을 한없이 확대하여 모든 정치적 논란을 갈등이라 하고 그 해결을 모두 ‘조정’이라고 강변하더라도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조읽기」에서 주장하는 “갈등을 조정하는 주체가 조선 후기의 국왕과 근현대의 대통령 혹은 총리라는 차이가 있고 갈등 조정의 원리는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최고의 권력자가 해당 시기의 정치 참여

층과 더불어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정치의 본질까지 다르지는 않다”는 내용을 다시 보자. 국왕과 대통령·총리의 차이는 그렇게 간단히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역사 탐구의 중심이 되어야 할 주제이다. 오늘날은 국민이 주권을 지닌 시대이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는 존재이지만, 국왕과 나란히 ‘최고의 권력자’라는 개념을 적용할 대상이 아니다. 국왕과 대통령·총리를 최고의 권력자라는 개념으로 함께 묶는 것은 그 본질적 차이를 간과한 피상적 접근이다. 오늘날의 국민을 ‘정치 참여층’이라는 용어로 조선시대의 백성과 함께 묶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조선 후기와 현대 사이에 갈등을 조정하는 원리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할 뿐 그 다른 점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역사학의 방법이 될 수 없다. 시대에 따른 근본적 차이를 무시한 채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정치의 동일한 본질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정치사 탐구 결과는 갈등 조정의 외형적 유사성을 비교하는 데 그치거나, 구태여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탐구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투적 교훈을 확인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역사의 ‘교훈’에 대한 환상

위와 같은 우려는 현실로 확인되는 듯하다. 「정조읽기」에서 탕평정치의 자산으로 제시한 것은 다음과 같이 ‘군주들이 당파를 관리하던 능력’이다.

조선 후기에서도 당쟁이 극성하였던 숙종과 영조와 정조 시대에 조선은 국왕이 환국(換局) 혹은 조제·보합의 방식으로 이들 당파를 관리하면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다. 물론 이 시기에 당쟁의 폐단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인

식도 있었지만, 당시의 군주들은 이들을 적절히 관리할 능력이 있었다. 이러한 관리 능력이야말로 정당정치가 당연시되는 현대 정치의 국정 담당자들이 조선 후기 당쟁사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⁰⁰⁹

여기서 말하는 정조의 봉당 관리 능력이란, 봉당의 현실을 부정하거나 인위적으로 타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각 당파를 안배하며 적절히 등용하거나 물리나게 하는 황극(皇極)=군국(君國)의 작동 방식을 구사한 것이다. 그렇게 하여 정조의 탕평책은 여러 봉당들과 공존할 수 있었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작동되었던 조선 후기 특유의 봉당정치 질서도 존중되었다고 한다.

위의 주장은 봉당 사이의 대립을 억누르고 나아가 봉당의 소멸을 지향했다는 데서 탕평정치의 의미를 찾던 기존 인식과 크게 다르며, 그만큼 치밀한 논증이 필요하다. 우선 공론을 표방하는 봉당정치가 과연 국왕에 의해 ‘관리’되면서도 그 의미를 유지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토론은 뒤로 돌리고, 군주의 봉당 관리 능력이 현대 정치의 국정 담당자들에게 중요한 자산이 된다는 문제의식 자체부터 검토해보고자 한다.

조선시대 국왕이 봉당을 관리하던 경험이 정당정치가 이루어지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국정 담당자들에게 어떤 자산이 된다는 것인지 그 내용이 그려지지 않는다. 굳이 해석해보는다면, 현대의 국정 담당자들이 국왕 정조가 봉당을 ‘관리’하던 원리와 기법을 교훈 삼고 정당정치를 수행하는데 적용하라는 뜻이 될 수밖에 없다. 위험한 생각이다. 오늘날 정치에서 국정을 수행하는 어느 누구도 조선시대 국왕에 비견될 수 없으며, 조선시대 봉당과 오늘날 정당은 성격과 작동 원리가 뿌리부터 다르다. 현대 정당 정치의 본질은 여론정치이며, 그 주인은 국민이다. 주권이 군주에게 있던

시대에 국왕은 신하들의 붕당·당쟁을 관리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오늘날의 정당은 그 자체가 국민주권을 반영하는 정치의 주체로서 누구에 의해서도 관리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굳이 오늘날의 국정 담당자들이 정조의 붕당 관리에서 배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왕의 붕당 관리를 오늘날 정치에 적용하거나 연결하려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일 뿐이다.

정조 연간의 정치에 대해 그 갈등의 조정을 우선적인 탐구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개별 연구자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권력을 쥐고 행사한다는 점에서 과거와 오늘날의 국정 담당자들 사이에 공통성이 있다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근본적인 차이점을 제쳐두고 표면의 공통점에 주목할 경우 오늘날과 다른 시대, 다른 사회를 이해한다는 역사학의 의의는 증발하고 만다. 과거와 현재의 표피적 동질성에 주목하여 역사를 ‘거울’로 여기고 거기서 ‘교훈’을 추출하던 것은 근대 이전, 중세의 역사학이다. 정치사 연구자가 피상적 동질성에 매몰되지 않고 직접적 교훈 추출의 유혹에서 벗어나 탐구해야 할 중심 주제는 역시 정치세력과 정치체제의 시대적 본질과 변화를 해명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3. 정조 탕평정치와 19세기 세도정치의 대비

1) 정조의 정치적 지향과 성과

정치를 주도하는 이들이 만들어낸 이념과 이론은 매우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다. 인류의 사회 인식이 발달해가는 과정을 이루며 현실 개혁의 방향타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구성한 지향과 실제 현실은 구

분하여야 할 것이다. 정조가 이끈 정치의 역사적 의미 역시 그가 제시한 이론이나 표방한 바에 따라 그대로 규정될 수는 없다. 「정조읽기」에 따르면, 「만천명월주인」을 표방한 정조는 군주로부터 신민에 이르기까지 보편적 ‘리(理)’를 기준으로 한 유학적 이상을 추구하였으며, 사대부의 공론을 중시하던 군신공치(君臣共治)의 전통을 배경으로 조선 후기 탕평정치의 군신관계와 그 정책들이 탄생하였다고 한다.⁰¹⁰ 하지만 정조는 정색을 하고 내린 하교에서 ‘신하의 충성과 여자의 정절은 마찬가지로 중요하며 임금이 비록 무례하다고 하더라도 신하가 충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비록 남편이 어질지 못하더라도 여자는 정절을 지키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⁰¹¹ 공론을 중시하는 봉당정치나 군신공치의 정치질서 속에서는 정식 화될 수 없는 말이다. 이와 같은 정조의 입장을 외면한 채 그가 표방한 군주론에 입각하여 그 정치의 성격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 정조의 비밀스러운 정치 공작, 신하들이 쓰는 문체에 가혹할 정도로 간섭하면서 자신은 비속한 언설을 구사하는 절대군주의 면모가 어찰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그런데도 정조의 유학적 이상을 강조하는 「정조읽기」에서는 정조의 그런 면모가 『정조실록』에서도 확인되는 개인의 ‘캐릭터’로서, 그에 대한 역사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⁰¹² 그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어찰뿐 아니라 『정조실록』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라면, 새롭지 않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정조가 글로 작성한 「만천명월주인옹자서」는 당시 정치의 본질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인 반면에, 실제 정치에 적용된 배후의 정치 공작이나 무원칙한 언사들은 개인 캐릭터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논외로 하는 것은 균형 잡힌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 앞선 논고에서는 정조가 ‘정도’가 아닌 ‘권도’를 동원한 이유를 화평의 정치를 시행하려는 목표 때문이라고 하

였다.⁰¹³ 하지만 정조의 정치 공작이 아무리 중요한 일을 위한 것이었다 할 지라도 그것이 정조 스스로 표방하던 명분과 조선시대 공론정치의 전통에 위배되는 방식이었다는 사실에는 변동이 없다.

영조를 이어 탕평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정조는 정치와 국가 운영에서 국왕의 절대적 지위를 지향했다. 영조와 정조가 지향한 정치 질서는 최근의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된 바 있다.

탕평정국 속에서 국왕은 스스로 천(天)에 비견되는 공평무사한 존재로서 국가 운영의 중심점이자 주재임을 자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통치체제의 강화를 꾀하고자 했다.⁰¹⁴

그와 같은 정조의 지향은 성군절대주의론(聖君絶對主義論), 때로는 초월적 군주권이라고 지칭되었다.⁰¹⁵ 정조가 절대적 군주권을 지향하면서 국정 구석구석을 치밀히 관리했음은 이미 여러 모로 확인되었다. 최근의 연구를 예로 들면, 정조는 문과를 비롯하여 관인과 유생을 위한 각종 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하곤 하였다. 출제 횟수는 재위 기간 동안 1,347편, 연평균 58.6편에 달한다. 특히 1789년 이후에는 매년 80~90편 이상의 어제를 출제 하였으며 후반으로 갈수록 어제를 통한 교육이 내용 면에서나 대상 면에서 더욱 확대되고 있었다.⁰¹⁶

하지만 정조의 군주상이 실제 정치에서 정조의 뜻대로 구현된 것은 아니었다. 정조는 산림(山林)의 권위를 해체하고 군주도통론(君主道統論)으로 그것을 대신하려 노력했지만, 그의 왕권 절대화의 논리는 신하들의 반발을 초래하여 군주도통론이 정조 연간에 확고히 뿌리내리지는 못하였고, 새로운 왕권 절대화의 논리를 내포하지 못하였다고 평가된다.⁰¹⁷

정조가 현실적으로 수행한 정치의 기본 방향이 붕당의 타파에 있었다는 것은 개설서 서술에 드러나듯이 대개 동의된 사실이다.⁰¹⁸ 조선의 정치·사회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할 목적에서 제기된 탕평론은 정치·사회적 현실을 파국으로 이끌던 붕당론을 퇴장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결론도 있다.⁰¹⁹ 일반적으로 정조는 사대부가 주도하는 붕당정치의 폐해를 억제하여, 국가와 문화의 다양한 부문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된다.⁰²⁰

조선시대 정치인들의 당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지만, 붕당을 타파하고자 한 정조의 정책은 장기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없었다. 더 많은 사람이 정치에 참여하게 된 사회발전 단계에서, 권력을 두고 벌이는 경쟁이 집단적으로 조직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력한 전제권이나 독재체제가 그것을 일시적으로 억누를 수는 있겠으나 조선 중기 이후로는 그런 상태를 지속시킬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다. 따라서 후대로 지속될 수 있는 정책은 붕당의 타파나 억제보다, 그러한 집단적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직하고 제도화하여 개인의 권력욕을 생산적인 사회적 에너지로 동원하는 것이었다.

정조가 영조를 이어 신하와 인민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여러 갈래로 강조되었다. 정조는 군주가 사대부를 포함하는 모든 신민에 대해 ‘민은 나의 동포’라는 입장에서 일원적으로 단일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했고, 민본정치를 넘어서서 백성을 나라 주인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민국’ 이념을 정립했다는 것이다.⁰²¹ 하지만 기존 논고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인식은 심각한 반대에 봉착해 있다. 영조나 정조가 사용한 민국의 개념은 백성의 삶과 나라의 살림살이라는 국정 운영의 대상을 가리키며, 정조 때까지 국왕이 민을 정치의 주체로 인식한 다거나 정치적 동반자로 상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다고 한다.⁰²² 정조

가 원칙적으로 백성의 정치 참여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정조의 백성관을 매우 적극적으로 평가한 논저에서도, 정조 치세 전반에 걸쳐 백성은 여전히 애민·위민의 대상으로 강조될 뿐 정치에서 백성의 능동성, 정치 참여의 능동성은 현실화되지 못했으며, 그것이 정조 탕평정치의 한 계로 지적된다고 하였다.⁰²³ 중인 이하 일반 백성들은 여전히 애민의 대상이었을 뿐이라는 지적도 같은 방향에 있다.⁰²⁴ 정조가 민본 이념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국가관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났다고 볼 근거는 확인된 바 없다.

하지만 정조가 백성과의 소통에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현격한 진전을 보인 것만은 틀림없다. 새로운 사회세력의 대두와 소민층의 성장이라는 객관적 실체 속에서, 상언·격쟁의 수용으로 대표되는 백성들과의 만남을 강화하고 소통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통합력을 제고하고자 하였다.⁰²⁵ 정조는 영조와 마찬가지로 성리학과 같은 보편적 원리에만 집착하지 않고 사회 각 부문의 개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복돋움으로써 국왕의 사회 통합력을 발휘하였다. 그러한 획기적인 인식과 정책은 지방정책, 특히 평안도 주민들에게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었다.⁰²⁶ 이러한 노력과 짝하여 정조 연간에는 노비제 폐지의 논의가 진전되었고, 토지개혁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었다. 노비제 폐지론은 정조 서거 직후 내시노비가 해방됨으로써 성과를 거두었지만, 조선 사회에서 가장 낙후된 제도를 부분적으로 폐지한 것이어서 사회발전의 동력이 되기에는 부족했다고 본다. 정조에게 신분제 자체를 철폐하려는 문제의식은 없었다고 설명된다.⁰²⁷ 토지개혁 논의는 가시적인 성과를 산출하는 데 이르지 못했다.

정조의 군주권 설정은 정치제도에 큰 변화를 빚어냈다. 정조에 앞서 영조는 일관되게 군주권 강화와 중앙집권적 관료제의 강화를 추구하였는

데, 정조 역시 그런 정책기조를 계승하였다. 정조가 추진한 정치제도 개혁은 먼저 재상의 정책결정권 강화에 집중되었다. 구체적으로 산림 세력의 정치 간여를 막고 공론을 반영하던 당하관 청요직의 통청권을 금지하였다. 이조 낭관의 통청권과 한림의 자대제를 막은 것 또한 같은 방향에 있었다.⁰²⁸ 특히 정조 대 중반 이후에는 당하관의 공론을 대표하던 전랑과 한림의 후임자 선발 역할이 크게 축소되었다고 지적되었다. 아울러 삼사·전랑·문임직을 중심으로 한 청직 중심체제를 해체하고 대신권-왕권 중심으로 구성된 새로운 권력구조를 수립하였다. 그러한 정책은 ‘파봉당(罷朋黨)’의 기조 위에서 추진되었으며, 삼사의 언론 활동이 매우 침체되는 폐단도 생겨났다.⁰²⁹

정조는 시전 상인의 독점판매권인 금난전권을 혁파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상업체계를 구축하려 하였다. 그의 화성 건설은 제도개혁의 시험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새롭고 다양한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들 역시 사회구조나 정치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었다는 데 근대 학자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정조의 정치가 근대 시민사회를 지향하거나 그 기반이 되었다는 설명은 오늘날 찾아들었다고 판단된다. 군신의리에 대한 집착에서 드러나듯이 그의 정치는 주자학의 명분론을 벗어난 것이 결코 아니었으며, 시민계급과 같은 새로운 사회세력을 확인하거나 기반으로 한 것도 아니라는 점이 거듭 지적되었다. 무엇보다도 25년이라는 짧지 않은 재위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조가 사망하자마자 그가 수립하려던 군주 중심의 정치 질서가 일거에 무너진 것에서 정조 정치의 한계를 짐작할 수 있다. 군주가 절대적인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국정을 직접 치밀하게 이끌었던 정조의 정치는 자신과 같은 역량의 군주에 의해서만, 혹은 시대적 모순이 점점 커짐에 따라

자신보다 더 큰 역량을 지닌 군주에 의해서만 지속될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군주가 계속 나올 수는 없었다. 앞에서 예를 든 바와 같이 유생을 대상으로 한 시험 문제를 국왕이 매년 80~90회 이상 직접 출제하는 방식의 정치 질서가 대대로 지속될 수는 없었다.

이런 이해가 정조 개인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정조는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뛰어난 역량을 갖추었으며, 군주의 입장에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생의 안정을 높이는 데 거둔 성과가 작지 않다. 정조가 지방민이나 지식인들에게 불어넣은 활력은 비록 그가 의도한 방향과는 다를지언정,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에너지로 터져 나오기도 했다. 예를 들어 정조가 평안도의 지역적 개성을 복돋우면서 그 지역 주민의 역량을 길러준 것은 흥경래의 난을 통하여 체제를 뒤흔드는 효과를 발휘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정조의 정치가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틀 안에서 주자학의 원리에 입각하여 추진되었으며, 시대구분이 적용될 만한 변혁을 지향하거나 수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최근의 연구에서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정조 정치의 역사적 성격은 그가 최고의 역량을 지닌 성실한 군주였다는 사실이 아니라, 최고의 역량을 발휘한 군주마저도 통치체제와 사회구조에서 후대로 계승될 새로운 틀을 수립할 수 없었다는 데 있다.

2) 세도정치의 실상

19세기에 행하여진 이른바 세도정치(勢道政治)는 직전의 정치 형태인 탕평정치, 특히 정조 연간의 정치와 여러 측면에서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무엇보다도 확고한 권위와 권력으로 정치와 국가 운영을 주도하던 국왕의 권력 행사가 19세기 들어 여지없이 약화되었다. 순조와 효명세자, 그리고

헌종과 철종까지도 한때나마 정조의 국정 운영을 모델로 삼아 국정을 주도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순조의 경우 19세가 되던 때부터 국정의 구체적인 면모를 파악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각 도에 암행어사를 대규모로 파견했으며, 『만기요람』 같은 국정 참고도서를 제작하게 하였다. 하급 관료를 포함한 신하들과의 접촉도 획기적으로 늘렸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은 새로운 사회세력은커녕 신하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⁰³⁰ 정조가 국왕 친위부대로 특별히 창설하여 운영하던 장용영이 정조 사후 만 1년이 못 되어 폐지된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순조, 헌종, 철종은 공통적으로 재위 10년을 전후하여 정조의 장용영 창설을 모범으로 삼아 독자적 군사력을 확보하려 하였고, 오위도총부의 기능을 회복하려 했으며, 무신들과의 유대 또는 친분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들은 훈련대장을 비롯한 군영대장들과 비변사를 장악하고 있던—왕의 외척을 핵심으로 한—권력 집단의 반대에 부딪쳐 모두 좌절하고 말았다.⁰³¹

세도정치기에는 관념상 왕실의 고유한 행사인 국왕과 왕자의 혼사가 신하들에 의해 좌우되었다. 조득영은 순조 12년에 국왕의 외삼촌인 박종경을 권력 집중과 부패의 죄목으로 극렬히 공격한 인물이다. 순조는 그의 처벌을 주도하여 만 5년 가까이 유배 상태에 두었고, 그 후로도 2년 가까이 지방에 묶어둘 만큼 그를 풀어주는 데 강하게 반대하였다. 그런데도 순조 19년 8월에 이루어진 왕세자 가례에서 조득영의 당내 8촌 형제인 조만영의 딸이 세자빈이 되었다. 경쟁자 박종경의 기세를 꺾어 김조순의 권력 독점을 도운 공로로 안동 김씨와의 협조 속에서 세자의 결혼이 결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국왕권 약화의 이면에는 앞 시기에 볼 수 없었던 권세가의 권력 집중

이 있었다. 순조의 외삼촌인 박종경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순조의 장인 김조순을 비롯하여 효명세자의 장인인 조만영과 김조순의 아들인 김유근, 조만영의 동생인 조인영, 김조순의 아들이자 김유근의 동생인 김좌근, 조만영의 아들 조병구와 조병현 등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때로는 서로 경쟁하고 때로는 서로 협력하면서 순조 대에서 철종 연간까지 최고의 권력을 장악하였다. 예외라면 순조 초년 수렴청정하던 정순왕후와 함께 벽파가 국정을 주도하던 시기, 효명세자 대리청정기 등이 있을 뿐이었다. 세도정치기 권세가들은 왕실의 외척이라는 권위, 정조의 학문·사상을 상징하는 규장각의 지도자로서의 권위, 훈련도감 등 정예 군영의 지휘권, 최고 행정기구인 비변사를 막후에서 움직이는 정치력, 인사·조세의 권한까지 모조리 장악했다고 평가된다.

세도정치기에는 소수 인물이 국정 주도력을 발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개혁의 노력이 없었다. 김조순을 예로 들면 ‘일의 성과를 자기 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이 그에게 바쳐진 칭송이었다. 세도정치기의 개혁 움직임이라면 국왕들이 정조를 모델로 국정을 파악하고 주도력을 강화하려 한 노력, 순조 대 중반에 숙종 대 경자양전의 100주년을 기념하여 양전 논의가 일어났던 것, 김조순이 평안도 지방민을 평양에 특별히 설치한 하위 관직에 임명하고 간간히 서울로 등용하게 한 것 등이 나열되는 수준이다.

그런 상황에서 사회 불안이 격심해졌다. 순조 11년(1812) 1월의 홍경래 난이나 1862년에 삼남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터져 나온 민란의 사정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다. 인민이 집단적으로 국가권력과 직접 대결하는 상황에 도달한 것이다. 그에 대한 대처에서도 세도정치기 국가 운영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홍경래의 난 때는 봉기군이 농성하던 정주성을 함락한 정

부군은 반란이 이미 진압되었는데도 성안에 남아 있던 성인 남자 1,917명을 현장에서 처형하였다. 천주교도에 대한 박해 또한 많게는 한 번에 8,000명까지 처형하였다고 전해진다(병인박해). 천주교에 대해 그 책을 불사를 뿐 교도는 사람으로 대우하라고 하면서 천주교도의 처형을 극도로 억제했던 정조 대 정치의 기준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한 집단학살은 범죄자 처형과는 범주를 달리한다. 국왕의 존재 의의를 인민의 교화에 두며, 범죄자를 처형할지언정 전체 인민 중 어느 누구도 교화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민본주의는 19세기에 이르러 완전한 파탄에 도달하였음이 확인된다.

3) 탕평정치와 세도정치의 단절적 면모

정조 연간의 탕평정치와 19세기의 세도정치가 위와 같이 대비되는 만큼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완전한 단절로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다음과 같은 서술이 대표적인 예이다.

정조에게서 절정을 이룬 조선의 유학적 계몽절대주의, 즉 성군(聖君)절대주의는 정조의 죽음과 함께 함몰한다. 그것은 그 자체의 한계라기보다 정치적 적대 세력의 작위적인 파괴에 의해 무너진다.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는 세도정치는 정치 형태상으로는나 행위 상으로 '반동'의 모습을 역력히 보인다.⁰³²

정조 대 후반 탕평군주가 주관했던 '화평'의 정치는 순조 초 정순왕후가 추동한 벽파 주도 환국을 거치면서 '살육'의 정치로 급변했다. 조선 정치의 수준은 급격히 하락하였고, 그 이후 세도정치 시기를 거치면서 더 이상 만회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다.⁰³³

특히 두 번째 인용문의 연구에서는 ‘막중한 책임감과 성실한 능력으로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있던 정조’와, ‘후대 군신(君臣)의 무책임과 무능함으로 인해 파탄 난 국정’을 대비시킴으로써 정조 정치와 19세기 세도정치의 단절 관계를 더욱 선명히 부각하였다. 그러한 시각은 여기서 일일이 예를 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일반적이다.

4. 세도정치와 정조 탕평정치의 계기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조 정치와 19세기 세도정치 사이에는 급격한 단절이 있다. 하지만 권력을 장악한 주체와 정치 운영의 결과가 아니라 세도정치가 빚어진 정치구조 등을 검토한다면 그 둘 사이에 단절의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것은 “19세기 전반 정치는 봉당정치-한국-탕평정치로 이어지는 조선 후기 정치사의 산물이다”라는 명제로 제시되기도 하였다.⁰³⁴

먼저 세도정치기 권세가의 권력 기반을 살펴보자. 왕실 외척이 정치에 간여하는 정도는 17세기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져왔는데, 정조 또한 그러한 추세를 억제하지 않았다. 또한 외척 권세가들의 권력 집중을 가능하게 한 정조 연간과 19세기 세도정치기 정치구조의 연관성은 훨씬 복잡하고 긴밀하다. 세도정치기 권세가들은 실제 권력관계가 어떻든 왕실의 권위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으며, 왕실의 권위는 적어도 외형상 세도정치기에도 계속 높아지고 있었다. 세실(世室)의 의례는 공적이 큰 국왕의 신위를 후대 국왕 4대가 끝나도 영녕전으로 옮기지 않고 계속 종묘에서 제향하는 것이다. 조선 후기로 들어와 그 결정이 시기적으로 일러지고 남발되었는데, 19

세기 들어서는 그 경향이 더욱 심해졌다. 세도정치의 권세가들은 세실 의례를 주도하면서 국왕의 높아진 위상을 자기 권력의 정당화와 분식에 활용하였다.⁰³⁵ 김조순이 규장각 검교제학이라는 지위를 오래 누린 것도 정조가 한껏 높여놓은 국왕의 권위를 규장각이라는 상징을 통해 자기 권력 강화에 활용한 것이다.

세도정치기 권세가들은 최정예 부대인 훈련도감을 권력 기반으로 삼았다. 김조순은 오랫동안 직접 훈련대장을 맡았으며, 권력이 안정된 후에는 자기 측근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었다. 조선은 원래 특정 정치세력이 군을 장악하는 것을 방지하는 원칙을 지켰으나 봉당 사이의 대립이 격화되는 와중에 정치세력 사이에 군영을 장악하려는 경쟁도 심해졌다. 정조는 결국 막대한 예산과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친위부대 장용영을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조선 건국 이후 찾아보기 힘든 특별한 사례이다. 비록 장용영은 정조 사후 철폐되었지만 세도정치기에 권력자가 정예 군부대를 직접 거느리는 현상은 정조가 시작한 군영정책에 그대로 연결된 것이다.

앞에서 정조가 대신권-왕권 중심으로 구성된 새로운 권력구조를 수립하였다는 연구 성과를 소개하였다. 정조가 일관되게 추진한 재상권의 강화는 그 시기에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공헌하였겠지만, 높고 낮은 관인들이 서로 견제한다는 조선 정치체제의 전통을 변화시켜 고위 관원들에게 권한을 집중시킨 것이었다. 19세기 권세가들이 측근인 고위 관원들과 함께 권력을 독점하던 구조는 정조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그의 재상권 강화정책에 연결된다. 그러한 정조의 정책 속에서 당하관이 공론을 조정에 반영하던 구조와 삼사의 언론 활동은 매우 침체되었다. 19세기에도 외척가문들이 권력을 집중시킨 배경에는 공론과 언론의 현저한 퇴조가 자리

잡고 있다.⁰³⁶ 19세기 세도정치를 가능하게 한 언론의 퇴조 역시 정조의 본래 의도에 관계없이 그의 정책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정조의 탕평정치에 찬사를 보내고 정조 시기의 개혁적 지향이 19세기에 들어서도 계승·발전되었음을 역설한 논고가 있다. 정조 시대 이래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여 여러 계층의 지식인들이 다양한 개혁의 노력을 기울이고 사상과 문화의 발전이 진행되었다고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그 연구에서도 김조순이 확립한 권력 독점의 세도정치체제는 기본적으로 탕평정치의 한계가 구조화된 것이었다고 평가한다.⁰³⁷

정조 연간의 정치와 세도정치가 맺고 있던 위와 같은 구조적 연관을 이해하지 못할 때 여러 방향으로 오해가 빚어진다. 예를 들어 「정조읽기」에서는 필자와 동료들의 견해를 본래 논지와 정반대로 소개하였다.

탕평정치 위주의 잣대를 기준으로 세도정치를 부정 일변도로 평가하는 시각에 대하여 강한 반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세도정치를 봉건사회 해체기의 발전적 정치 형태로 보는 시각이다(주석: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정치사』, 청년사, 1990). 봉건사회를 지탱하는 군주제로는 근대국가로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군주가 아닌 근대적 민중의 성장에 따른 새로운 체제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⁰³⁸

필자와 동료들뿐 아니라 학계의 어느 누구도 세도정치를 ‘봉건사회 해체기의 발전적 정치 형태’로 보거나 그것을 ‘민중의 성장에 따른 새로운 체제’와 연결시키는 상상력을 발휘한 이는 없다. 위의 평가는 필자와 동료들의 결론 중 “19세기 전반의 정치는 그러한 중세 정치의 내적인 발전이 최고의 단계에 이르러 나타난 것이다”라는 문장을 오독한 결과일 수 있다. 거기서 ‘발전’이라고 한 뜻은 정조의 정치를 포함한 조선 후기 정치의 자

체 논리가 계속 전개된 끝에 세도정치가 나타나고 운영되었다는 것이다. ‘조선 후기 정치사의 연장으로서 나타난 19세기 전반의 정치’,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중세 정치의 한계와 모순이 심화되어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구절이 ‘발전’ 문장의 앞뒤를 이루고 있다.⁰³⁹ 위와 같이 잘못된 평가는 대상 서적의 전편에 흐르는 세도정치기 권력 독점과 기층사회로부터의 괴리에 대한 비판, 나아가 “그 시기의 국가권력과 관료체제는 수탈의 기구임을 뚜렷이 드러냄으로써 사회모순을 은폐하는 최소한의 구실조차 하지 못한 채 부정과 극복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와 같은 맹렬한 비판을 모두 간과한 것이다.⁰⁴⁰ 근본적으로는 정조 탕평정치와 19세기 세도정치의 구조적 연결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오독이라고 생각한다.

「정조읽기」의 그러한 오독은 저자의 다른 논고에도 그대로 연결된다. 그는 정조 연간에 ‘발전일로에 있던 조선의 정치가 세도정치 시기에 갑자기 쇠락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하는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그는 우선 필자 등을 지목하여 세도정치의 원인(遠因)을 ‘정조의 탕평정치에 그 책임을 귀결’시킨다고 하였다.⁰⁴¹ 미묘한 왜곡이다. 필자와 동료들은 정조의 ‘책임’을 묻은 바 없다. 정조의 정치가 세도정치와 어떻게 구조적으로 연결되는가를 설명했을 따름이다. 필자와 동료들의 관심은 개인을 ‘포퓰’하고 ‘책임’을 묻는 데 있지 않았다. 그런데도 필자와 동료들의 논지를 ‘책임’ 문제로만 접근하며 이렇게 비판을 이어갔다.

이러한 설명은 후대 군신(君臣)의 무책임과 무능함으로 인해 파탄 난 국정에 대한 책임을 막중한 책임감과 성실한 능력으로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있었던 전임 군주에게 덮어씌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세도정치 시기의 사회적 발전상과 정치적 퇴보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⁰⁴²

오독 또는 왜곡이 중첩되어 있다. 우선 필자와 동료들은 위와 같은 비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 필자와 동료들은 세도정치 시기의 사회적 발전상과 정치(적 퇴보)를 일치시킨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작은 문제이다. 위의 논자는 정조에 의해 발전일로에 있던 조선 후기의 정치가 세도정치로 갑자기 쇠락한 데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지만, 그에 대한 답은 ‘책임 추궁’의 문제, 정치적 ‘퇴보’ 그 자체의 확인에서 조금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개인의 책임이나 노력에 우선적 관심을 두는 한 자신이 구성한 역사상에 시대적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것은 필연적인 사정이다. 그것은 「정조읽기」에서도 확인된다. 그 글에서는 정조 연간 정치의 실상을 설명하고 다른 이들의 견해를 비판하였지만, 전후 시기의 맥락에서 그 시기 정치가 지니는 의미에 대한 서술을 찾을 수 없다. ‘정치·사회적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당시 인물들이 어떤 기준으로 이합집산하고 있었는지 정밀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을 따름이다.⁰⁴³ 정치사 탐구의 급선무를 이렇게 잡는 데는 동의하기 힘들다. 오늘날 정치의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현재 여당·야당 정치인들이 어떤 기준으로 이합집산하고 있었는지 시시콜콜 정리하는 일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공론과 명분이 더 중요하던 정조 대 정치의 이해에서는 정치적 이합집산이 갖는 의미가 더 작았을 것이다.

정치가의 ‘책임’을 묻고 정치가의 이합집산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것들은 18·19세기 정치사 연구의 중심 과제가 될 수 없다. 조선 후기 정치사 연구자는 전통시대의 역사학처럼 포럼을 가하고 교훈을 얻는 데서 벗어나, 구조와 사건들 사이의 인과관계에 입각하여 시대에 따른 정치의 ‘변화’를 규명하여야 한다. 정조 연간 탕평정치와 19세기 세도정치 사이의 계기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5. 맺음말

첫머리의 연구 시각에 대한 토론에서는 너무나 기초적인 사실들이지만 그동안 조선 후기 정치사에 대한 학계의 논의에서 소홀히 취급되어온 주제들을 검토하였다. 오늘날은 국민이 주권을 지닌 민주주의 시대이며 조선은 군주가 주권을 지닌 군주제 시대였다. 이렇게 전혀 다른 시대를 연구하면서 피상적인 공통성·동질성을 바탕으로 교훈을 찾으려 하는 것은 현대 역사학의 본령이 아니다. 탕평정치나 정조의 정치에 포함된 갈등의 조정, 붕당의 관리 등이 당시 정치를 이해하는 핵심이 될 수는 없고, 그러한 표피적 현상을 복원한다고 해서 현대 민주주의 정치를 추구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는 없다. 아니, 본질적으로 다른 사회의 표피적 현상을 가져다 현실의 실천이나 이해에 적용하려 한다면 오히려 현실 정치를 왜곡하게 된다. 주권의 소유자이던 조선시대 군주가 주도하던 정치 논리는 오늘날 대통령·총리에게 적용하거나 연결시킬 수 없다. 정치사 연구자가 탐구해야 할 중심 주제는 역시 정치세력과 정치체제의 시대적 본질과 변화를 해명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후반부에서는 정조 연간 정치와 19세기 세도정치의 구조적 연관을 검토하였다.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전반 두 시기의 정치가 정치 운영의 외양, 정책 추진과 그 성과 등에서 전면적으로 대비되었다. 하지만 그런 대비에도 불구하고 두 시기의 정치가 구조적으로는 긴밀히 연관되어 있었다. 그것을 학계 일각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 것은, 역사 속에서 활동한 인물들을 노력이나 책임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일과, 시대와 시대가 맺고 있는 인과관계를 해명하는 일이 서로 분리되는 것임을 확실히 하지 않는 데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정조 정치와 세도정치가 연계된 구체적 내용을 다시 요약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세도정치의 본질을 그 시기 정치가들이 돌출적인 반동성을 발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말 수는 없다. 19세기 세도정치는 조선 후기 정치사가 전개되어간 끝에 귀결된 정치 형태이며, 정조의 정치 또한 그러한 계기성(繼起性)의 중요한 고리를 이루고 있다. 그것은 정조 개인의 역량과 성실성, 그가 거둔 개혁정책의 성과와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필자와 같은 연구자들은 정조 개인의 역량이나 성실성을 평가하는 데 주된 관심을 두지 않을 뿐이다. 잘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묻는 것은 중세 사학에서 하던 일이지, 근대 역사학의 본령이 아니다.

조선 후기에 정조의 탕평정치를 거쳐 19세기 세도정치로 이어지는 계기성의 의미는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조선의 통치체제가 수명을 다하여 붕괴되어가고 있었음을 생생하게 확인시켜준다는 데 있다.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통치체제 붕괴의 다른 한편에서는 민이 국가권력과 직접 대면하고 대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19세기에 이르러 정치의 현상이 획기적으로 넓어지고 격렬해진 것이다. 歷

오수창

현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조선 후기 정치사를 전공했으며, 최근의 관심 주제는 왕실과 국가체제의 기반과 의미, 조선 후기 문학작품의 정치적 성격 등이다. 대표논문으로 『조선 후기 평안도 사회발전연구』, 「조선의 통치체제와 춘향전의 역사적 성취」 등이 있다. ohsoo@snu.ac.kr

참고문헌

- 김백철, 「영조대 ‘민국’ 논의와 변화된 왕정상」, 『조선 후기 탕평정치의 재조명』 상, 태학사, 2011.
- 김성윤, 『조선 후기 탕평정치 연구』, 지식산업사, 1997.
- 김용흠, 「19세기 전반 세도정치의 형성과 정치 운영」, 『한국사연구』 132, 2006.
- 김인걸, 「정조의 ‘국체’ 인식」, 『정조와 정조시대』,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
- 金駿錫, 「탕평책 실시의 배경」, 『한국사』 32, 국사편찬위원회, 1997.
- 金駿錫, 「18세기 蕩平論의 전개와 王權」, 『東洋 三國의 王權과 官僚制』, 國學資料院, 1998.
- 박광용, 『영조와 정조의 나라』, 푸른역사, 1998.
- 박광용, 「3. 정조 대 탕평정국과 왕정체제의 강화」, 『한국사 32. 조선 후기의 정치』, 국사편찬위원회, 1997.
- 박현순, 「정조의 『臨軒題叢』 편찬과 御題 출제」, 『규장각』 48, 2016.
- 배우성, 「공간에 관한 지식과 정조 시대」, 『정조와 정조 시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 백승중, 『정조와 불량선비 강이천』, 푸른역사, 2011.
- 변원립, 『순원왕후 독재와 19세기 조선 사회의 동요』, 일지사, 2012.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정치학의 이해』, 박영사, 2010.
- 송양섭, 『18세기 조선의 공공성과 민본 이념』, 태학사, 2015.
- 오수창, 「18세기 조선 정치사상과 그 전후 맥락」, 『정조와 18세기』, 푸른역사, 2013.
- 오수창, 「세도정치를 다시 본다」, 『역사비평』 1991년 봄호.
- 오수창, 『조선 후기 평안도 사회발전 연구』, 일조각, 2012.
- 오수창, 「조선 후기 체제인식과 민중운동 시론」, 『한국문화』 60, 2012.
- 유봉학, 『개혁과 갈등의 시대—정조와 19세기』, 신구문화사, 2009.
- 이경구, 「총론: 새롭게 보는 정조와 19세기」, 『역사비평』 115, 2016년 여름.
- 이태진, 「정조—유학적 계몽절대군주」, 『한국사 시민강좌』 13, 1993.
- 이태진, 「조선왕조의 유교정치와 왕권」, 『한국사론』 23, 1990.
- 이태진, 「정조의 『대학』 탐구와 새로운 군주론」, 『이회재의 사상과 그 세계』,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92.
- 이태진, 「조선시대 ‘민본’ 의식의 변천과 18세기 ‘민국’ 이념의 대두」, 『조선 후기 탕평정치의 재조명』 상, 태학사, 2011.
- 최성환, 「‘정조-심환지 어찰’과 조선 후기 정치사 연구의 전망」, 『역사와 현실』 79, 2011.

최성환, 「조선 후기 정치의 맥락에서 탕평군주 정조 읽기」, 『역사비평』 115, 2016년 여름.
한상권, 「백성과 소통한 군주, 정조」, 『역사비평』 89, 2009년 겨울.
한국역사연구회 19세기정치사연구반, 『조선정치사 1800~1863』 상·하, 청년사, 1990.
홍순민, 「정치 운영과 왕권의 추이」, 『조선시대사 1. 국가와 세계』, 푸른역사, 2015.

- 001 이경구, 「충론: 새롭게 보는 정조와 19세기」, 『역사비평』 115, 2016년 여름, 122쪽.
- 002 한국역사연구회 19세기정치사연구반, 『조선정치사 1800~1863』 상·하, 청년사, 1990; 오수창, 「18세기 조선 정치사상과 그 전후 맥락」, 『정조와 18세기』, 푸른역사, 2013(『역사학보』 123, 2012에 실린 같은 제목의 논문을 수정한 것임); 오수창, 「조선 후기 體制認識과 민중운동 試論」, 『한국문화』 60,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2.
- 003 앞 시기와의 연장선상에서 19세기 전반 민의 정치 활동을 강조한 연구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 수 있다. 안병욱, 「19세기 민중의식의 성장과 민중운동—‘향화’와 ‘민란’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1, 1987; 한명기, 「제7장 사회세력의 위상과 저항」, 『조선정치사 1800~1863』, 청년사, 1990; 김인걸, 「조선 후기 여론과 정치—‘公論政治’의 지속과 단절」, 『조선의 정치와 사회』, 집문당, 2002; 배향섭, 「19세기 지배질서의 변화와 정치 문화의 변용—仁政 願望의 향방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39, 2010.
- 004 최성환, 「조선 후기 정치의 맥락에서 탕평군주 정조 읽기」, 『역사비평』 115, 2016년 여름호.
- 005 위의 글, 149~150쪽.
- 006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정치학의 이해』, 박영사, 2002, 3쪽(『정치학 대사전』, 박영사, 1975의 재인용).
- 007 김준석, 「18세기 蕩平論의 전개와 王權」, 『동양 삼국의 왕권과 관료제』, 국학자료원, 1998, 288~290쪽.
- 008 오수창, 「18세기 조선 정치사상과 그 전후 맥락」, 43쪽 참조.
- 009 최성환, 「조선 후기 정치사의 맥락에서 탕평군주 정조 읽기」, 138~139쪽.
- 010 위의 글, 144~145쪽.
- 011 『정조실록』 정조 18년 9월 30일 갑인; 윤정, 「정조 대 단종 사적 정비와 ‘군신분’의 확립」, 『한국문화』 35, 2005, 264~266쪽; 오수창, 「18세기 조선 정치사상과 그 전후 맥락」, 39쪽.
- 012 최성환, 「조선 후기 정치의 맥락에서 탕평군주 정조 읽기」, 130쪽.
- 013 최성환, 「‘정조-심환지 어찰’과 조선 후기 정치사 연구의 전망」, 『역사와 현실』 79, 2011, 337~340쪽.
- 014 송양섭, 『18세기 조선의 공공성과 민본이념』, 태학사, 2015, 158쪽.
- 015 이태진, 「정조—유학적 계몽절대군주」, 『한국사 시민강좌』 13, 1993, 73~78쪽; 이태진, 「조선왕조의 유교정치와 왕권」, 『한국사론』 23, 1990, 227~228쪽; 김용흠, 「19세기 전반 세도정치의 형성과 정치 운영」, 『한국사연구』 132, 2006, 198쪽.

- 016 박현순, 「정조의 『臨軒題叢』 편찬과 御題 출제」, 『규장각』 48, 2016, 159~165쪽.
- 017 김성윤, 『조선 후기 탕평정치 연구』, 지식산업사, 1997, 186~201, 326쪽.
- 018 개설서 서술의 최근 사례는 홍순민, 「정치 운영과 왕권의 추이」, 『조선시대사 1. 국가와 세계』, 푸른역사, 2015, 40쪽.
- 019 박광용, 『영조와 정조의 나라』, 푸른역사, 1998, 271쪽.
- 020 다만 「정조읽기」는 견해가 다르다.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정조가 봉당을 관리하여 탕평이 여러 봉당들과 공존할 수 있었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작동되었던 봉당정치 질서도 존중되었다는 것이다(최성환, 「조선 후기 정치의 맥락에서 탕평군주 정조읽기」, 137~140쪽).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넘어야 할 고개가 많다. ‘황극’이라는 말로 대표되듯 군주의 절대적 지위를 현실에 구현하고자 한 탕평정치와 신하들의 공론을 앞세운 봉당정치의 질서를 대립적인 것으로 보아온 것이 지금까지의 통설이다. 논자도 지적했듯이 영조까지만 하여도 봉당 타파를 목적으로 삼았다. 정조가 각 봉당의 원칙론을 조정해 수렴하려 한 노력은 확인되지만, 정조가 내세운 절대적 군주권과 신하들의 공론이 현실정치에서 조화롭게 양립한 상황은 눈앞에 그려보기 쉽지 않다.
- 021 이태진, 「정조의 『대학』 탐구와 새로운 군주론」, 『이회재의 사상과 그 세계』,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92; 이태진, 「조선시대 ‘민본’ 의식의 변천과 18세기 ‘민국’ 이념의 대두」, 『조선 후기 탕평정치의 재조명』, 태학사, 2011, 36~38쪽. 이러한 설명은 영조대의 발전적 면모를 계승한 것이다. 김백철, 「영조대 ‘민국’ 논의와 변화된 왕정상」, 『조선 후기 탕평정치의 재조명』 상, 태학사, 2011, 117~119쪽.
- 022 김인걸, 「정조의 ‘국체’ 인식」, 『정조와 정조시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133~135쪽.
- 023 김성윤, 『조선 후기 탕평정치 연구』, 140~141쪽.
- 024 최성환, 「조선 후기 정치의 맥락에서 탕평군주 정조읽기」, 142쪽.
- 025 한상권, 「백성과 소통한 군주, 정조」, 『역사비평』 89, 2009년 겨울, 164~166쪽.
- 026 오수창, 『조선 후기 평안도 사회발전 연구』, 일조각, 2012, 78~99쪽.
- 027 최성환, 「조선 후기 정치의 맥락에서 탕평군주 정조읽기」, 142쪽.
- 028 박광용, 「3. 정조 대 탕평정국과 왕정체제의 강화」, 『한국사 32. 조선 후기의 정치』, 국사편찬위원회, 1997, 85~86쪽.
- 029 김성윤, 『조선 후기 탕평정치 연구』, 159~185, 324~325쪽.
- 030 이하 세도정치기의 왕권과 권세가 등에 대해서는 한국역사연구회 19세기 정치사연구반, 『조선정치사 1800~1863』에 의거함. 이 책에 대해서는 변원립(『순원왕후 독재와 19세기 조선사회의 동요』, 일지사, 2012)의 전면적인 비판을 비롯하여 그 외 논고들에서 비판과 수정이 가해졌다. 그러나 필자의 경우 주요 논지를 변경할 필요는 느끼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변원립이 반남 박씨 여러 인물이 정계에 포열되어 있었다는 이

유로 김조순의 독재를 부정한 것(23쪽)은, 그 시기 외척들이 정치적 기반이 동일한 까닭에 적대하면서도 공존하는 정도가 높았다고 설명한 것을 무시한 것이다. 또한 필자는 순조가 효명세자로 하여금 김조순 세력을 견제하도록 했음을 정치적 맥락 속에서 길게 설명했는데, 변원림은 그것을 ‘뒷받침할 사료가 없다’는 서술로 간단히 부정하였다(31쪽). 역사적 상황의 탐구가 사료 해석으로 대체될 수는 없다. 다만 이 책의 필자 논고에 사실의 오류가 있다. 영조대 흥봉한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을 소개하면서 그를 사도세자의 ‘외조부’로 기재한 것(73쪽)은 ‘장안’의 잘못이다. 그 오류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32. 조선 후기의 정치』 중 필자가 답당한 「2. 세도정치의 전개」(244쪽)에 그대로 이어졌고, 재판에서 비로소 수정하였다. 또한 필자가 주로 『조선정치사 1800~1863』을 바탕으로 집필한 『한국사 32. 조선 후기의 정치』의 「1. 세도정치의 성립과 운영구조」에서 朴齊炯의 『近世朝鮮政鑑』에 19세기 정치를 가리키는 ‘勢道’의 용어가 처음 쓰였다고 한 것(201쪽)은, 변원림이 위 책 33쪽에서 지적한 대로 ‘世道’의 오류이다. 순 한글의 원칙으로 작성된 원고에 한자를 덧씌우는 과정에서 빚어진 잘못이다. 이 오류의 지적에 대해 감사드린다.

- 031 위의 책 중 오종록, 「제9장 중앙 군영의 변동과 정치적 기능」, 474~483쪽.
- 032 이태진, 「정조—유학적 계몽 절대군주」, 85쪽.
- 033 최성환, 「정조-심환지 어찰과 조선 후기 정치사 연구의 전망」, 349~350쪽.
- 034 한국역사연구회 19세기정치사연구반, 『조선정치사 1800~1863』 하, 결론, 762쪽.
- 035 위의 책, 576~582, 597~598쪽.
- 036 위의 책, 608~617쪽.
- 037 유봉학, 『개혁신과 갈등의 시대—정조와 19세기』, 신구문화사, 2009, 24~31쪽.
- 038 최성환, 「조선 후기 정치의 맥락에서 탕평군주 정조 읽기」, 128쪽.
- 039 한국역사연구회 19세기정치사연구반, 『조선정치사 1800~1863』 하, 764~765쪽.
- 040 위의 책, 759쪽.
- 041 최성환, 「정조-심환지 어찰과 조선 후기 정치사 연구의 전망」, 350쪽. 여기서는 『조선정치사 1800~1863』과 유봉학, 『개혁신과 갈등의 시대—정조와 19세기』를 비판 대상으로 지목하였다.
- 042 최성환, 「정조-심환지 어찰과 조선 후기 정치사 연구의 전망」, 350쪽.
- 043 최성환, 「조선 후기 정치의 맥락에서 탕평군주 정조 읽기」, 140쪽. 정파의 정확한 분류에 대한 강조는 최성환, 「정조-심환지 어찰과 조선 후기 정치사 연구의 전망」에서도 마찬가지이다(346쪽 등).

Elucidating how he was remembered in the 19th century and how the memory took on various aspects in the political context of the time is an interesting and important study. The actions of the king were recalled by his successors in order to strengthen their royal authority; bureaucrats depicted King Jeongjo as a scholarly sovereign who listened to his vassals. Political factions at different times recollected aspects of his reign in their own way. King Jeongjo was usually regarded as a perfect ruler and his reign an era of prosperity. The 19th century was one of introspection on King Jeongjo's era and rule rather than one of praise. Examination of how he administered affairs of state and governed his country, and why his government encountered difficulties despite the king's desperate effort to surmount them, had been conducted at the time. However, most of the ruling elites of the time, including succeeding kings, focused on praising the king's legacy for their own advantage. Although at the present time a growing interest in King Jeongjo reflects aspirations for a new leader, the memory of the king formed without critical introspection can become divorced from reality. The same mistake which had been made in the 19th century should not be repeated today.

Key words: King Jeongjo; King Soonjo; Crown Prince Hyomyeong; King Heonjong; King Cheoljong; King Gojong; Kyujanggak Royal Library; civil officials chosen to study in the Kyujanggak Royal Library; Office of Robust and Brave Guards; Office of Capital Defense; Office of Palace Guards.

■ A Trialogue among King Jeongjo's Policy of Impartiality, Dominance of Royal In-Law Families in the 19th Century and Modern Historiography

Oh, Soo-Chang

The core principles of modern historiography do not appear to have been fully reflected in some studies of the late Joseon period's political history. There is still a tendency to extract lessons based on superficial similarities between past and present. This cannot be the main purpose of modern historiography. It is possible to find a category mistake on what the politics is now and then. The priority for political historians is not the restoration of superficial phenomena but the explanation of historical causation through political forces and political system. Politics in the late 18th and in the early 19th century were closely connected, despite sharp contrasts in their appearances. The dominance of Royal In-Law

Families in the 19th century was the legacy of politics throughout the whole of the late Joseon period. King Jeongjo's reign was the inevitable and essential link in that historical connectivity. The ancient regime of the Joseon state was bound to collapse in spite of King Jeongjo's desperate efforts to reinvigorate it.

Key words: Political History; Policy of Impartiality(Tangpyeong; 蕩平); Dominance of Royal In-Law Families(Sedo; 勢道); King Jeongjo; Modern Historiography.

■ Japan's Upper House Election on July 10th and the Whereabouts of the Abe Administration

Park Cheol Hee

At an Upper House election on July 10, 2016, Japan's ruling LDP and Komeito secured absolute stable majority by obtaining 146 seats out of 242 seats in total. Considering that ruling coalition parties have 352 seats in the Lower House, LDP regime led by Abe can maintain a very stable political foundation in both houses. Through this election, Prime Minister Abe raised the potential to serve his tenure by 2018. Though he may step down from the post, Abe will still remain as the most influential Japanese politician in Japan's Diet where a number of LDP members have got party nomination under his leadership.

At this Upper House election, combined seats of political parties supporting constitutional revision went beyond two thirds majority in both houses. This means that Japan can open a road for substantial constitutional revision. However, actual process of constitutional revision may be more turbulent than expected in that each political party has different conception and priority in revising existing Peace Constitution. In particular, popular resistance against the revision of article 9 is still high. Even when the Peace Constitution is revised, the probability of reversing the basic spirit of the current constitution may not be high.

Key words: Upper House election; absolute stable majority; Prime Minister Abe; LDP president; constitutional revision; Article 9 of Peace Constitution.